

#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 이낙연 총리, 文 대통령 메시지 듣고 정부 대표로 방일 아베, 한국과의 대화 의지 밝혀... 해빙 여건 조성 관측도靑, 기대감 낮추며 신중히 주시... 고위급 대화 물꼬에 방점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로 한일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대신 한일 간 대화의 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 편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친서 등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있어 있던 한일 관계에 조금씩 해빙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정부 대표 고위급 인사 자격으로 찾는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과 관련해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엄중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통으로 입을 모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와 관련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일 문제를 해결

해나가길 바란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고, 거기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조치를 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를 사전에 미리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등 최대한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풀 공은 일본에게 있다”며 “지금까지 관계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총리의 방일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왕 즉위식은 이웃나라로 도리를 다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아베 총리 역시 이를 전인 지난 16일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의 근본을 규정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지

하는 등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 한국에 대해 우선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일부 감지된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대화도 고위급으로 확대된다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초석을 까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고위급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도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대화는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기회를 받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내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할 것이라 말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그 정도로 한일관계가 진전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뉴시스



‘졸을 서시오’ 주한외교단이 지난 18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기 위해 졸을 서고 있다.

## 한노위 국감서 ‘멧돼지 돼지열병’ 미온대처 십자포화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의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진됐을 당시 멧돼지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성급하게 결론 냈다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있다. 멧돼지 폐사체가 늘어난 데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니었을까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지자체에서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멧돼지로 인한 농장 유입 위험을 강조하며 개체 수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속 건의했는데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 지역에 대한 멧돼지 총기포획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경기 파주를 시작으로 농가의 사육 돼지에서만 검출되다가 이달 2일 연천군 DMZ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 1마리에서 처음 나온 뒤 지금까지 9마리로 늘었다. 농가의 지역별 검출 건수는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등 총 14건이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연천 4건, 철원 4건, 파주 1건이다. 이중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7마리다. 나머지 2마리의 발견 장소는 DMZ 안쪽 1마리, 민통선 남쪽 1마리였다.

/뉴시스

## 빅데이터로 산불·도심 미세먼지 대응책 찾는다

### 행안부,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정부가 산불과 도심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빅데이터에서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교육개발원, 대구시, 강원도, 창원시 등 9개 기관과 ‘2019년도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올해로 5년 차인 이 사업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4~5개 과제를 정해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권익위와 소비자원의 ‘국민불편 해소 위한 민원과 국민여론 융합 분석’ ▲소방청과 강원도의 ‘산림 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분석’ ▲국민연금과 창원시의 ‘지역 내 개인소득·소비와 기업활동 빅데이터 분석’ ▲교통안전공단과 대구시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를 활용한 도심지 대기오염 분석’ ▲교육개발원의 ‘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업 및 진로 가이드 제공’ 등 5가지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과 국민여론 융합 분석’은 권익위와 소비자원이 각각 보유한 민원 데이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여론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기관이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분석’은 대형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 발생과 진화 패턴, 인구, 상수도 등 각종 환경요인의 연관성을 분석해 소방용수 확보 취약지수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

‘지역 내 개인소득·소비와 기업활동 빅데이터 분석’은 인구 현황과 개인 소득·소비, 기업 활동 등 지역 내 경제활동 요인 간 연관성을 분석해 경제활동취약지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경제활동 위기 지역과 개선정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DTG 데이터를 활용한 도심지 대기오염 분석’은 상업용 차량에 부착된 DTG를 통해 차량 운행 기록을 분석해 도심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속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업 및 진로 가이드 제공’은 교육개발원이 보유한 대량의 대학 졸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취업·진로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년층이 주체적으로 직무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직종·진로 추천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행안부는 과제 수행후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내년 1월께 범정부 성과공유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이자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이라며 “데이터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부처 간 공감대를 확산해 보다 더 스마트한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靑, 日 활어차 단속 청원에 “해수 문제 없어... 주기적 검사 추진”

일본 대형 활어 수송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관련해 18일 청와대는 활어차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해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출 전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일본 수산물 식품 안전 우려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

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난 7월 27일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 강매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 제목으로 처음 올라온 해당 청원글은 한 달 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8월 25일 21만 3581명으로 마감했다.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수산물 활어차와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청원글이 올라왔다.

특히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청원인은 “폐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신중한 검토를 위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간 연기했다. 여러 부처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답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뉴시스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